
질의 및 응답

Q: 질문 A: 응답 C: Comment

Q)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대학의 기초연구에 관계되는 간접비 개념이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간접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비를 사용하고 난 뒤의 회계 상의 처리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의 간접비는 미국의 간접비를 본 따서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건비와 직접비를 가지고 연구비를 구성하고 그중에 몇 퍼센트의 간접비율을 줍니다. 비율은 각 대학마다 다른데, 연구자가 연구 계획서를 만들면서 연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간접비율이 얼마 추가되어 연구비 신청이 들어갑니다. 항목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건비와 직접비의 몇 프로 인정하는 것처럼 미국도 몇 프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만 국가 규정에 의해 15%로 정해져 있고 미국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간접비 비율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엔 8%였다가 서서히 철폐되었습니다. 연구비에 대한 감사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하지 못했지만 걸리면 바로 옷 벗어야지요

Q) 그런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는 대학에 주는 연구비에 대한 과감한 제도 개선을 할 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A) 저도 정부 출연기관에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가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의지만 있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했구요. 이른바 정부의 역할분담, 지방 정부의 역할분담 등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비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은 연구개발 사업 개발 과정에서 나온 조항으로 그것에서 15%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연구비도 정부 연구비를 가지고 끌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과거 남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니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도 '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이 한마디로 딱 자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의 문제는 다른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님

이 연구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연구비 감사를 강화한다는 것을 믿고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행정상 어렵지 않을까요?

A)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연구비에 대한 우리 나라 공무원의 생각은 ‘연구비를 준다, 그래서 대학 교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연구비도 주는데 또 주냐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연구가 필요하고 대학교수가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정부는 우월한 입장에서 연구비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비에 대해 접근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해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Q) 정부 연구 개발비의 목적이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는 네가 필요한 것을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옹용이라든지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순수한 활동 영역이거든요. 연구개발비로 따진다면 60-70%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로 하고 너희들이 하려는 일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A) 그러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교포들도 소득세에 대한 애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도 거기서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IRS에서 다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걸리면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것이죠. 미국생활이 어떠냐면 내가 요만한걸 위해서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전수 조사는 물론 할 필요가 없고요. 그저 톡톡 하나씩만 표본 조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감사가 됩니다.

C) 간접비 부분이 일단 정부 쪽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쉽게 결정을 하면 가장 빠른 길이고 나머지 대학의 자율경쟁체제 교수연봉과 관련된 길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입니다. 일단 출구로서 첫 번째로 간접비와 연구비 심사제도에서 기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간접비와 관련해서 캐나다는 40%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일본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하면서 대학 문제를 가장 확대시켰고, 해결책 역시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간접비를 중요 수단으로 넣었습니다. 일본도 원래 비율이 0%였다가 지금은 10%인가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간접비 제도를 도

입해도 별 무리 없이 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회계제도가 투명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회계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우리나라 회계학의 수준이 배를 한척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회계학도 많이 발달했지만요, 연구인력 면이나 R&D차원에서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성책 이후에 반드시 감사를 할 때 도덕적인 것보다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제도가 대학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주 희한한 사례를 겪었는데, 우리 연구소가 열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외부 발주했는데, 부산의 작은 대학 교수는 2000만원도 채 안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돈을 몇 백만원 남겨서 정산을 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대학은 회계 관리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하고, 회계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돈 쓰는 것은 대학본부가 일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카드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대학 본부가 시의 적절하게 결제 금액을 주지 않아서 카드 결제 금액에 시달리다 보니 연구비를 쓸 수가 없어서 자기가 돌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했고, 그래서 2000만원이 안되는 작은 금액의 연구과제에도 몇 백을 남겨 온 거예요. 현재 대학 행정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공립대학은 R&D 강제시행으로 그나마 좀 낫지만 사립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교수들에게 5%를 떼고 나머지를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형식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C) 우리 연구소의 경우 사회과학연구비가 대략 50억 정도인데 이걸 위해 행정요원이 7-8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물며 연구비가 큰 서울대나 기타에서는 전담 요원이 1명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의 인센티브 스킴이 모자란다는 거죠. 정부의 기본적인 발상이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침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죠.

C) 자율경쟁은 사회 전분야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연봉제와 성과급을 준다고 하면서 회계시스템과 더불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활발히 연구되는데, 예를 들어 기술 분야는 보다 활발하고 인문 분야는 덜 활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에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을 보면 총장이 다 직선제인데 직선제가 좋아 보여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총장 준비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잠재적 지지자인 교수들에게 좋게 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것도 중요한 요소지요.

C) 저는 평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잘되려면 기획이 잘돼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은 연구의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기업 연구의 목적은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출연 기관들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안 해야 할 역할까지 하는 비대해진 상황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의 목적 설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구소의 목적 설정이 확실하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과 조직의 생존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펼쳐진다면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게 되고 개인적인 연구가 파생되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아주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연 연구소 평가한다면 어떻겠어요? 상식적으로 moral hazard만 없으면 되는 거고 goal setting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operation이 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봐야 하지 않는가, 물론 회계부분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급한 것은 목적 설정입니다.

A) 골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스트레치가 있고 그것에 따른 액션 플랜이 나와야 그게 체계적인 절차이죠. 우리나라는 골 셋팅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어떤 타겟만 나온다는 거죠. 골-스트레티지 액션플랜 이런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성 타겟이라는 것이죠.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간접비와 자율경쟁의 폐해 같은 것들이 평준화적인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학교수들이 철밥통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자유 경쟁체제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까 경제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이라고 탁 풀어놓지 않습니까, 풀어놓으면 몇몇 대학은 더욱 비대해 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많은 대학들은 점점 왜소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적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을 보면 ‘에스카’라고 NSF에서 20년 넘게 추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실험적 프로그램인데, 각 주에서 우리 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와 그 주의 산업과 대학이 서로 연계되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프라 구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와 산업체가 matching fund의 일정 비율을 대는 것을 조건으로 NSF에서 36개월 동안 커다란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6개월에는 다시 신청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주로 넘어가

는 것이죠. 그러다 또 다음 36개월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갖는 기본적인 혜택은 각 대학이 연방정부의 연구비를 따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의 세부프로그램의 두 번째는 NSF에서 펀딩을 할 때, 에스카 프로그램에 의한 펀딩을 따로 가져 왔다가 해당 분야에서 프로포절 심의를 했는데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돈을 줄만은 한데 자기네 필드 예산에서 주지 못 할 때, 에스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에스카 담당 부서에서 펀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떨어질 과제를 지원해줘요. 자꾸만 연방정부의 예산을 따게 합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하면 경쟁력이 낮은 대학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워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적인 경쟁 상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위에 있는 대학과 붙을 수 있게 계속 양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쟁체제로 몰고 갈 때 에스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없이 경쟁을 실시한다면 질은 지금보다 못하며 몇 개의 대학들의 독과점 형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보다 피해가 더 커집니다. 지방대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상위권에 대학이 계속 경쟁상대가 나옴으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대학 교수님들이 철밥통이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간접비를 제안하면서 대학 학과의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OECD에서 내놓은 표를 보았는데, 특히 지적재산권 수입이 있을 때 대학과 학과와 발명자들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갖는지에 대한 조사를 내놓은 게 있어요. 선진국의 많은 대학이 대학도 먹고 학과도 먹고 발명자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과 발명자 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과 미국 대학이 강의 조직에 있어서 갖는 차이점 중 하나가 학과 지출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 일단 학과가 권한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학과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독자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재정의 수입 지출 권한을 갖게 되면 아무도 학과의 행동에 제약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간접비를 올려 주면서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간접비를 40%의 비율로 올리고 간접비의 3분의 1이나 30%를 무조건 학과에서 쓰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규정 한마디면 학과가 재정수입을 기준으로 돌아가므로 교수들을 데리고 올 때 여기 학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교수를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엔 철밥통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요. 지금은 교수님들 뽑을 때 이 사람이 내편인가 나를 총장으로 밀어줄 수 있는가가 문제지 이 사람의 능력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연구비를 따와서 우리 학과에 기여할까 안 할까도 상관없거든요. 학과가 또 재정수입에서 간접비에서 30%이상 사용하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에 대한 행정지원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교수

20명이라면 1~3명이면 충분해요. 연구 행정이 매일 수시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명당 1명 정도면 학생 연구 관리에 쓰이는 시간이 해소되지요. 학과는 경쟁력이 살아나고, 또 학과가 변화하면 대학의 메커니즘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간접비를 학과가 쓰게 한다는 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 총장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한 정부의 인센티브 스킴이에요. 과기부에서 연구개발비가 출연연구소보다 대학으로 더 많이 나갑니다. 80년대엔 출연기관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대학에 더 많이 나가요. 그러나 과기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 권한이 아니야, 나는 그저 시행만 해주면 돼’ 이런 거예요. 그저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NSF의 방식을 배워 오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돈을 나눠주면서 인센티브 스킴을 어떻게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정부 정책으로서 조금만 가이드라인이 바뀐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정책에 의해서 대학의 학과들이 육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록펠러재단이라든지 카네기재단 같은 곳의 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연구비자체가 굉장한 인센티브로 작용했거든요.

Q) 과학재단에선 경쟁을 시키는지요? 또 경쟁을 시키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들은 철밥통이면서 그저 경쟁만을 외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A)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자율과 경쟁과 분권이 대학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출연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 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일 잘하는 사람과 B라는 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데려 가려고 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일을 잘 못하니까 아무도 데려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일 잘하는 A의 연봉이 4천이라 하면 4100, 4200 부르는 거죠. B는 아무도 안 불러 주고 공짜로 일 해도 안 받는다 하면 인사 관리과에서 저 사람 연봉은 얼마큼 올려주고 이 사람 연봉은 이만큼 깎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어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텐데 이 방식이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가 남한테 지고는 못산다는 것 아닙니까? 내 핸드폰은 저 사람의 핸드폰보다 좋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핸드폰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게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

고 봅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것을 공동연구로 하지 말고 개인연구로 하자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확 풀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더 효율성이 높지 꼭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잘 못하면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지,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에게 푸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간접비를 정책적인 면으로 인센티브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원래 간접비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대학과 정부가 싸우면서 비율을 조정해 왔는데 미국에선 이 간접비가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간접비의 비율을 높인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율을 높이는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믿을 수 없는 시스템 하에서 간접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네요.

A)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간접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리트로스펙티브고 다른 하나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리트로스펙티브는 현재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간접비를 과거에 연구에 들어간 비용을 회계적으로 계산해서 연구비 얼마가 들어갔을 때 지원비가 얼마가 들어갔더라 하고 여러 회계기관이 조사하여 책정한 것이 현행 간접비 비율입니다. 그 방식을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간접비 비율을 리트로 방법으로 이미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인정이다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도 엉망이고 그걸 받쳐줄 시스템도 없습니다. 리트로 방식의 문제점이 회계하는 비용까지 회계에 더한다는 겁니다. 각 대학이 2-3년마다 검증할 때 간접비 설정에 회계가 다 간접비에 포함이 되고 또한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정당하게 나온 돈이므로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퍼스펙티브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건데 몇 개의 그룹 군을 선정해 놓고 규모에 따라 이 정도 규모에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 적용시키는 겁니다. 간접비를 순수하게 연구에 지원되는 비용으로만 본다면 이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Q)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A) 간접비 개념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정에 들어가는 지원비로 본다면 지속적인 회계가 보완이 되어야 하고 follow up 되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비가 갖는 기능이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이미 넘어섰더라 하는 얘기

입니다. 대학의 중요한 재정수입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간접비가 갖는 부수적인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연구에 지원하는 기능에만 국한시키느냐 이겁니다. 전체적인 지원금인 셈으로 봐야지 회계에 대한 지원은 상관이 없는 거죠.

C) 제가 기업체 연구 소장을 30년 정도 했는데 연구에는 돈이 들어감으로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대략 10%만 성과를 거둬도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90%의 돈도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럼 그것을 낭비로 볼 것이냐? 아니라는 얘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당장은 성공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연구 개발에 대한 마진으로 간접비를 준다는 얘깁니다. 마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연구하면서 적자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연구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국가 정책으로 얼마의 비율을 정해서 마진을 간접비의 형태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